

# '이웃 쓰레기 받아' 폭발한 나주SRF 갈등...반입결정 의혹 증폭

### 전남도 '사실상 광주권 쓰레기 반입' 승인...SRF 갈등 초래 연료 둔갑한 광주쓰레기 대량 반입 승인 과정서 '인 전결처리'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수천억원 대에 달하는 '손실보존방안 마련'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 간 이견으로 협상이 '산 넘어 산'이다.

여기에 7년 전 광주권 가연성 생활쓰레기 연료 반입을 반겼는데 공 뉘듯이 결정한 지자체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SRF열병합발전소 갈등은 나주혁신도시와 이웃한 대도시인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행정이 낳은 결과물로 비판받는다.

내 지역에선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쓰레기 소각장 가동이 어렵게 되자,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만들어 이웃 지자체로 떠넘기면서 갈등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4일 뉴시스 취재결과 지난 2011년 9월 열린 제2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이었던 신 모씨는 "우리시(광주시)의 입장에서 만 보더라도 고형연료(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만든 성형 RDF) 발전시설 운영으로 행여 지역주민들께 건강상의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공개 발언했다.

신 전 국장은 이어 "이러한 염려 때문에" 사

업추진 과정에서 난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발전(소각)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고형연료)생산시설만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신 전국장의 발언 내용 중 가장 이기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속기록 내용은 "(광주시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인근 나주의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의 환경오염 문제는 염려의 날줄과 씨줄을 풀어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신 전 국장의 계획대로 광주시는 이후 지난 2014년 6월 난방공사 등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2018년 6월 광주 남구 양과동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 소각로와 발전시설을 제외한 '정정빛고을'이라는 SRF(생활쓰레기 고형폐기물 연료) 생산시설 만 준공하게 된다.

이 법인사업장은 광주시(25%), 한국지역난방공사(16.6%), 포스코건설(5.6%), KB광주SRF시설사모특별자산투자(49.1%)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운영 주체인 난방공사는 광주시가 주관하는 SRF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지난 2013



지난달 28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앞에서 지지부진한 손실보존 방안 마련에 항의하는 집단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년 8월1일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실에 먼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광주권)SRF 활용 동의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의 요지는 '지난 2009년 당시 전남도를 비롯해 전남 6개 시·군과 체결한 업무협약 합의서에 따라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지역 SRF연료 부족으로 '발전소 건설을 보류'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권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을

통해 연료 부족난을 해결하려 한다'며 전남도의 동의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문제는 전남도가 난방공사에 회신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나주)지역 주민과 도의회 등의 의견을 묻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공문을 발송한 이후부터 시작된다.

지자체별로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주민들이 사실상 쓰레기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1일 440t(5t 트럭 기준 88대 분량)에 달하는 광주권 SRF 반입 여부를 묻는 중

차대한 의사 결정을 전남도 담당자는 공문이 수신된 당일 '사실상 동의 한다'는 내용으로 즉각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신공문은 상급 결재라인(국장·전남부지사·전남지사)도 거치지 않고 '환경정책담당 전결'로 처리·발송해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지난 2018년 10월22일 김영록 전남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나선 최명수(더불어민주당·나주2) 도의원은 "전남 지역 생산 연료의 두 배에 달하는 광주권 쓰레기 연료를 반입하는 결정을 이해 당사자 간의 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뭉개에 쫓기듯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주시도 같은 해 8월29일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난방공사로부터 수신했지만 전남도 회신 공문내용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작성된 내용의 공문을 다음날(8월30일) 곧바로 난방공사에 발송함으로써 갈등의 불씨가 된 광주권 SRF연료 반입을 승인한 셈이 됐다.

하지만 공문이 오간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전남도와 나주시의 전·현직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승호기자

## 코로나 이동 줄어든 추석...범죄신고도 10% 감소

### 중요 범죄 신고도 약 10% 감소

추석 연휴를 전후로 전국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가 전년 명절 대비 1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도 등 신고와 교통사고 발생 등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전후에 해당하는 지난달 30일 0시부터 이날 0시까지 평균 가정폭력 112 신고는 898건으로 전년 1041.7건 대비 약 13.8% 감소했다.

또 중요 범죄 신고는 1773건으로 전년 1971건보다 약 10% 줄었다. 일평균 절도 신고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또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사망자는 전년 6.7명에서 올해 5명, 부상자는 전년 861.7명에서 올해 453.8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에서만 960명을 붙잡는 등 수사를 전개했다. 주민 체감 치안과 직결되는 강·절도와 생활 주변 불안감을 조성하는 길거리 폭력 등에 집중 대응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광주 지역 과일상자 절취, 인천



지난 3일 경찰들이 서울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 관련 검문검색 하고 있다.

지역 지갑 절도 등 사건 관련자가 검거됐다. 아울러 경기 북부에서 절도 수배차량 관련 사건과 대전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운전자를 위협한 사건 관련자 등이 붙잡혔다.

경찰은 또 금융기관·귀금속점·편의점 등 대상 범죄예방진단,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1만 3195곳에 대한 점검, 고속도로 진·출입부 등 혼잡예상지역 교통관리 등을 전개했다.

제주·경기 용인·대구 등지에서 실종 관련 대응이, 강원 강릉·경북 칠곡·전북 무주 등에선 아동과 치매 노인 등에 대한 구조 등 지원 활동이 이뤄졌다고 한다.

오유나기자

## "무면허 사고 낸 10대 운전자, 선불리 특정" 이의 제기...경찰 보강수사

### '운전자' 지목 고교생 가족 "여러 정황 근거 간과" 주장

최소수 무면허 운전으로 6명이 다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로 추정된 고교생의 가족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은 담당 조사관을 바꿔 보강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오전 4시20분께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8)군 등 또래 5명이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무면허 운전 차량에 탑승한 10대 5명과 SUV차량 운전자 등 총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승자 4명의 진술, 사고 직후 운전·조수석 신발 위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등을 들어 A군을 운전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A군을 비롯한 모든 탑승자들이 차 밖으로 옮겨져 있었고, 경찰이 운전자로 유력 추정된 A군만 현

제까지 온전한 진술을 할 수 없다.

A군 가족은 "경찰이 여러 정황 근거를 간과하고, 선불리 운전자를 특정했다"며 교통사고 조사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다.

A군 가족은 "경찰이 추정된 사고 경위는 남득이 되지 않는다. 상대 차량과 직접 충돌한 조수석측 탑승자가 가장 많이 다쳐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 운전했다고 본 A군만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전석에 앉은 A군이 충돌 직후 조수석 측 차내 구조물과 부딪혀 중상을 입은 것 같다'는 경찰의 사고 경위 추정에 대해 반론을 폈다.

이들은 "경찰이 확보·제시한 EDR(사고기록장치) 기록에 따르면 시속 145km로 달리던 차량이 급정거를 시도, 충돌 직전 속도가 시속 47km까지 줄었다. 상대 차량은 4차선 갓길에서 서행 중이었다"며 "운전자가 조수석측으로 심하게 쏠릴 정도의 충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차내 탑승자의 몸이 모두 조수석측으로 쏠린 상황에서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조수석측 앞좌 탑승자 2명이 많이 다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A군의 오른쪽 어깨에 남은 자국은 충돌 직전 자동차로 조여진 조수석 안전벨트로 보인다"며 "경찰이 다른 동승자의 어깨에 남은 안전벨트 자국을 확인만 했더라도 탑승 위치를 쉽게 가려낼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과수조차 경찰이 의의한 혈흔 감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차내 조수석 주변에 묻은 혈흔만 감정했다면 의혹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며 "A군 아닌 다른 누군가가 조수석에 탑승했다는 감식 결과 만으로 A군을 운전자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A군 가족은 "경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사고 경위가 명백해진다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봉우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